



사진 사진공동체재단

한미안보회의, 대만 문제 명시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

관련 기사 3면

기후 위기

자본주의적 해결책은
왜 불가능한가? 6면

마르크스주의,
생태, 계급 7면

기후 운동 전망 논의 8면

코로나19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지배자들은 왜 코로나19
대응에 이토록 찻찻매나 4면

위드 코로나 실패하고
서민에게 고통 전가 12면

물가 상승

계속되는 물가 상승,
임금 투쟁으로
벌충해야 9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되는가? 12면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의 맥락 11면

에너지 무기화가
벌어질 것인가? 2면

청년층의
사회 불만은 어떻게
젠더 갈등인 양
왜곡됐는가? 10~11면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5면

민간위탁 중심의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열악한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

김은영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초등돌봄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 이용자를 각각 10만 명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가 확대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확대됐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600여 개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 정책은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필요에 크게 못 미친다. 양적 확대조차 불충분할 뿐더러 서비스의 질도 보장받기 어렵다. 초등돌봄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해 지자체는 서비스 기관을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올해 2월 전국돌봄노동조합이 출범한 이유다. 전국돌봄노조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전국돌봄노조 황재인 정책담당은 본지에 다함께돌봄센터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여러 얘기를 들려줬다.

“각 지자체 재량에 맡겨 조건이 천차만별이에요. 공적 돌봄이라지만 대부분 수익성 중심의 민간위탁에 내맡겨져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요. 실적만 쌓으려고 (센터를) 우후죽순 만들면서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제대로 사전조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노동자들은 아이들을 충원하지 못하면 고용이 위협받을까 봐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홍보물을 반포하기까지 해요.

“대다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1년 미만의 계약직 비정규직이에요. 고용 불안과 최저임금으로 고통받으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아



문재인 정부는 초등돌봄을 확대했지만, 돌봄 노동자들의 조건은 열악하다. 전국돌봄노조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돌봄의 질과 직결된 문제예요.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노동자들은 일하는 중간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나가버리거나, 더 일하고 싶어도 계약 만료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신입 돌봄 교사들이 많아요.”

과중한 업무

구청 직영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영등포구청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의 노동자들은 모두 1년 미만의 계약직 비정규직이다. 2년을 초과해 일한 노동자가 없다. 최근 이 노동자들은 내년 2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영등포구청장에게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는 청원을 올렸다.

과중한 업무도 노동자들의 불안 사

항이다. 학생 20명 당 교사 1명이 돌봄 업무와 행정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법정연차휴가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전국돌봄노조는 교사충원 등의 지원을 확대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는 다함께돌봄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황재인 씨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조건은 더 나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정부가 시설임대료를 지원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후원금 형식으로 납부해 이를 충당해요. 임대료 인상과 후원 감소로 존폐 위기에 있는 곳도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조차 조사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

시설 중 준수율이 가장 낮아요.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늘어나면서 초등돌봄 지원 확대 요구가 높다. 그런데도 2019년 기준 초등학생 공적돌봄 이용률은 14.5퍼센트에 불과했다.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는 노동계급 등 서민층 자녀에게 매우 중요하다. 부유층의 자녀와 달리,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서민층 가정의 아이들은 사회적 지원이 없다면 방치되기 쉽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여성도 많다.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이 많아져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초등돌봄은 미래의 노동력을 키우

고 기존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와 자본가들이 마땅히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국가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돌봄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재계제] 신자유주의의 대안

★ 법무부, 미혼 독신자에
친양자 입양 허용 등 추진
다양한 가족 포용하기엔
뒤늦고 미흡

★ 이재명의 조카 변화가 문제일까

★ 노해투에 던지는 질문

에너지 무기화가 벌어질 것인가

이미 에너지 생산은 제국주의 간 경쟁과 맞물려 있다. 러시아와 유럽연합(EU)이 가스 공급을 놓고 긴장 관계에 있는 것에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러시아는 EU의 당면한 가스 부족 문제 해결을 돕겠다며 나섰지만 그 대가로 EU와 미국이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을 지지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 가스관을 이용하면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수년째

관여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EU에 더 가까운 국가가 되고자 한다.

중국의 부상과 석탄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려 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요를 빠르게 키우고 있다. 그래서 LNG를 수입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에너지 공급 문제로 정전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 만큼 중국 국가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주요 자본주의 강대국들 — 미국, 중

국, EU 국가들 — 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것은 경제가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국면에서 석유와 가스 가격이 치솟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의 실패를 보면 이런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 그런 만큼 제국주의 간 핵심 단층선을 따라 에너지 공급을 둘러싼 경쟁이 장차 치열해질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그렇지만 러시아와 EU 사이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의 '노르트 스트림2' 수송 가스관 부설 모습

한미안보협의회의의

대만 문제 놓고 미국 편든 문재인 정부

김영익

12월 2일 한미 국방장관들이 서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SCM 결과는 특히 문제적이다.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을뿐더러, 무엇보다 대북 군사 위협을 키우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한 한국의 협력 증진 약속이 담겨 있어서다.

무엇보다 이목을 끈 것은 대만 문제 언급이다. SCM 성명에 처음으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이 명시된 것이다. 이는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대만해협 관여를 정당화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는 지난 5월 바이든-문재인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SCM 성명의 ‘대만 문제’ 문구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구체적인 군사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 연례 회의에서 합의된 성명이므로 그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대만해협은 미·중 갈등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만일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나면 자칫 한국마저 끌려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에 협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11월 23일 대만해협을 지나며 무력 시위를 하는 미군 구축함

한미 국방장관들은 또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작전계획이 수정될 예정이다. 일상적인 대북 감시·정찰을 강화하고 북한 내 ‘최우선 타격 표적’을 대폭 늘리는 한편, 심지어 유사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사용 옵션도 작전계획에 포함될 듯하다.

중전선언 추진이 무색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 군사 위협을 더한층 강화한 것이다.

양국 군 당국은 내년 한미연합훈련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지만 미·중 갈등과도 관계있다. 올해 중국 정부 관리와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이 [역내] 정세를 긴장하게 하는 행동’이며 ‘동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전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비난했다. 한미동맹의 역할이 대중국 견제 쪽으로 확대됨을 경계한 것이다.

한편, 이번 SCM 성명에서는 “성주

기지 사드 포대의 정례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이 사드 문제의 “최종 목표”로 명시됐다. 사드의 영구 배치 수순을 밟으면서, 미군이 자유롭게 성주 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국 정부가 협력하겠다는 약속이다.

사드 배치는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감행했을 만큼 예민한 문제다. 그래서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사드 배치 재검토” 운운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면서 그 말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미국과의 합의로 사드 배치를 확실히 매듭지으려 한다.

여전히 성주 현지의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관련 장비의 반입과 기지 공사에 항의하고 있다. 위 합의는 이러한 주민들의 평화적 항의를 확실히 제압하겠다는 공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 SCM 성명에는 미·중 갈등의 예민한 쟁점들이 새로 포함됐다.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에서 [한미의]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하기로 했고, 한미 군 당국이 “5G, 차세대 이동 통신(6G) 분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에 기초해 미국은 중국 봉쇄 문제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군사 협력이 더 증진될 길도 열릴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한미 정상 회담에 이어 이번 SCM에서도 한미동맹 강화를 선택했다. 이에 따른 위협과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게 분명하다.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커지는 갈등은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군비 경쟁이 격화되는 만큼 노동계급의 부담과 희생이 커질 것이다.

계속 악화되는 대만해협 긴장

11월 16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첫 미·중 정상 회담을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놓고 그렇다. 12월 2일 미국 국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가국에 대만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대만과 미국의 정부 간 공식 교류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을 공식 초청했다.

앞서 11월 29일 중국 군용기 27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침범했다. 여기에는 전투기 외에 전략 폭격기와 최신형 공중급유기 등도 포함돼 있었다. 중국은 군용기를 대만 쪽으로 빈번하게 보내고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시진핑 중국 정부의 태도는 날로 강경해져 왔다. 대만이 미·중 갈등의 최전선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만에 무기 수출을 늘렸고,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했으며,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대만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여 중국을 자극했다. 이런 점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다.

양안[중국과 대만] 통일에 반대하는 민진당 차이잉원이 대만 총통이 되면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왔다. 민진당은 이미 여러 차례 집권하며 대만 지배계급의 주요 정치세력이 됐고, 차이잉원은 시진핑 정부의 홍콩 항쟁 탄압에 대한 대만 사람들의 반감에 힘입어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한 1992년 양안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 지배 관료에게 양안 통일(사실상 중국에 대만 편입시키기)은 절대 포기 못할 숙원이다. 시진핑 정부는 대만에 대한 군사 압박을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민진당을 후원한 대만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최근 오키스(AUKUS)를 결성한 호주뿐 아니라, 일본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만 문제에 적극 관여하려 한다. 대만과 그 주변 항로에 일본의 커다란 지정학적·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미일 동맹

12월 2일 일본 전 총리 아베는 “대만의 유사사변이 곧 미·일의 유사”라며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과 함께 일본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서 “불장난을 하다가 자신을 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국방백서에서 대만 문제 관여를 처음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또, 일본은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동시에 2020년대 후반까지 사거리 1000킬로미터가 넘는 순항미사일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른바 ‘적 기지 보

유 능력’을 갖추려는 것인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행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충돌로 번지지 않게 “가드레일”을 놓자고 애기했다. 그러나 대만해협을 둘러싼 기류는 여전히 불안해지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대다 경제적으로 상호 밀접한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말 그대로 “공멸”을 의미하므로, 양측이 대만 문제를 잘 관리해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방지할 “가드레일”을 설치해도, 갈등의 근원이 되는 핵심 쟁점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장기 경제 침체 속에서 주요 국가들의 불협화음이 커졌고,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경제적 도전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점점 날카롭게 상충하고 있다.

지난 10월 미국 외교협회장 리처드 하스는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목표는 대만 독립 선언을 단념케 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을 방지하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사 ‘상황 관리’를 위해 그가 거론한 조치들은 역내 미군 전력 강화, 일본·호주와의 통합 방위 구축, 대만의 방위 능력 강화 등이다. 모두 중국을 자극해 대만을 둘러싼 상황을 ‘관리’하기는 커녕 상황을 악화시킬 방안들이다.

물론 중국이 대만 사람들의 자결권을 부정하고 강제로 통일을 시도하는 것도 제국주의적 행동이다.

중국과 대만 양국 노동계급의 단결만이 대만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방안이다. 그리고 한국의 혁명적 좌파는 대만해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의 불안정을 일으키는 미국과 중국 두 제국주의 강대국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편을 든다면 그것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동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대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 (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역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미크론 변이 — 왜 지배자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이토록 찢찢매나

몇 주 전 나는 저명한 경제학자 조너선 포티스의 글을 읽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코로나는 크리스마스까지이지만 브렉시트는 평생 갈 것이다.” 당시에 나는 이 말이 브렉시트에 대한 견해를 떠나서 우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이 말은 훨씬 더 우습게 들린다.

[바이오 연구 재단 웰컴트러스트의 사무총장 제러미 파라는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팬데믹의 종식보다는 시작에 더 가깝다”고 썼다. 이것은 자본주의 권력층이 회피하려 애쓰는 진실이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그런 회피의 한 극단적 사례다. 존슨은 율어를 방역 조치 대부분을 완화된 뒤 치솟은 감염율과 백신 접종이 결합돼 영국이 집단면역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이제 존슨은 에드워드 루스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쓴 대로 “한 나라 차원의 집단 면역은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사회 상층의 지배계급이 코로나19 대응에 이토록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쨌든 그들은 막대한 자원을 가동시킬 수 있고, 가장 발달한 과학 지식과 가장 정교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첫째 이유는 자본주의가 (인간 사회도 그 일부인) 자연을 그저 인간이 장악할 대상이자 원료 저장고로만 대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연 파괴가 심각해질수록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의존이 커진다. 기후 변화 대응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지배계급 주류는 화석연료 자본주의를 해체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해를 완화시켜 줄 기술이 등장하는 데에 도박을 걸고 있다.

백신도 기술적 해결책의 또 다른 사례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시라. 효과가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빠르게 개발한 것은 수많은 생명을 구한 놀라운 과학적 성취다. 나도 부스터샷을 하루빨리 맞고 싶다.

그러나 자연은 역동적인 변화 과정의 복합체다. 이는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다중 우주(우리 지구는 그것의 극히 작은 일부일 뿐인)라는 거시적 수준에서도 진실이고, 바이러스가 생겨나 되도록 많은 세포를 집어삼키며 번식하려 애쓰는 미시적 수준에서도 진실이다.

따라서 백신이 인체 세포에 구축한 방어벽을 더 잘 우회할 수 있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유전적 변이가 자연 선택 과정에 따라 발현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했었다.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은 바로 그런 변이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

여기서 둘째 이유가 나온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자연과 맺는 상호작용은 일차적으로 인간의 노동을 통해 이뤄진다고 했다. 하지만 그 관계 자체는 지배적 생산관계에 따라 구성된다. 지금의 지배적 생산관계는 자본의 임금 노동 착취에서 비롯된 계급 적대와, 서로 적대하는 기업·국가들 사이의 경쟁적 쟁투다.

이런 상황의 결과 하나는 백신이 이윤을 위해 생산된다는 것이다. 최대 백신 생산 기업인 화이자는 내년 출시할 백신으로 29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투자 분석가는 화이자 백신(사실은 독일 기업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했다)을 “일생일대의 황제”라고 불렀다.

게다가 백신 공급은 세계적 차원에서 부와 권력의 서열을 드러냈다. 부국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은 자국민을 위한 백신을 차지했지만 바이러스가 빈국들을 휩쓸도록 내버려뒀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G7 국가들에서는 국민 66퍼센트가 백신 접종을 2회 받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그 수치가 6퍼센트에 불과하다.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의 수는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백신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맞은 사람의 수보다 거의 두 배 많다.”

이런 어마어마한 불평등은 새 변이가 배양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그런 변이는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 특히 면역 체계가 취약한 사람에게서 성장할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 많은 사람이 감염됐기 때문에 이 변이는 이전 감염 혹은 백신 접종으로 획득한 면역을 우회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모든 것에서 얻을 교훈은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유엔의 말 그 이상이다.

자본주의는 생명을 위협한다. 자본주의를 제거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설정할 때만 인간은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84호 / 번역 김준효



파란은 오미크론 변이

세계적 차원에서 부와 권력의 서열을 드러낸 백신 공급. 부국들은 바이러스가 빈국들을 휩쓸도록 내버려뒀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문성

이 기사와 함께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를 읽으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월 5일 전북 유세에서 '농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의지도 확인했다.

“기본소득은 논쟁이 많아서 당장 시행하진 못할지라도 미래사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시절까지 청년배당 등 이른바 부분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해 왔고,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가 올여름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가장 먼저 발표한 공약도 기본소득 지급이었다.

월 2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 대통령 임기 내 월 8만 원 수준(1년 100만 원, 25만 원씩 4회 지급)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여기에 만 19~29세 청년들에게는 2023년부터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종목표는 1인당 월 50만 원을 제시했다.

이 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밀바닥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연 100만 원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조세 감면 폐지 등을 제시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금으로 부자 증세에 해당한다. 탄소세는 배출 감축을 위해 도입해 그 일부를(나머지는 산업 전환에 사용) 기본소득 배당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증세로 걷은 돈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 지급”(배당)하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기본소득 지급을 연계시킨 것은 이재명 표 기본소득 공약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역강부약(강한 쪽을 억눌러 약한 쪽은 돕는다)” 슬로건과 부합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은 민주당 주류가 가하는 온건화 압력을 일부 수용해 친기업 발언을 대폭 늘리고 노동공약 발표도 미루고 있다. 그 여파로 최근 이재명이 기본소득에서 후퇴할 조짐을 보인다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독자 출마했다.

우파의 반대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들은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에 반대한다.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더 확대해 그동안의 기업 소유 비과세 대상 토지 등까지도 세금을 부과한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국가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할 것이다.

또,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리가 국가복지와 소득 보장을 개인의 당연한 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반대가 더 크면 기본소득을 하지 않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리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것이다. 우파들은 가난하다는 낙인 효과를 내는 잔여적 복지를(마지못해) 지지해 왔다.

사실은 국민의힘도 총선 참패 후 김종인에게 당권을 맡겼을 때 정강에 기본소득을 포함시켰었다. 이재명도 이번엔 이 점을 꼬집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동의한 일이고, 국민의힘 정강 정책 1조1항에도 있다.”

심지어 우파는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이 액수가 적다고도 비판한다. 예컨대 친박 실세였고 지금은 윤석열의 국민의힘 내 초기 후견자 구실을 했던 김재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월 5만 원 주면 지하철 정가권 요금 수준인데, 그게 무슨 소득인가.”

그러나 우파들이 기본소득을 정강 정책에 포함시키고, 기본소득의 액수를 문제 삼는 게 복지 전반을 늘리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정반대다.

우파가 오세훈의 안심소득처럼 기본소득 비슷한 걸 얘기할 때는 그 반대급부로 다른 복지를 대폭 삭감하는 조건부 방안이다. 복지 총액이 늘지 않으니 증세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직접 말하는 복지를 줄이고 일종의 바우처처럼 복지 시장화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이용할 수도 있다.

게다가 기존 복지를 삭감하고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발상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더 형편이 어려워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필요할 땐 언제든’이라면, 필요에

따른 선별성은 정의로울 수 있다.

무엇보다 우파들은 “역강부약” 정신에 입각한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이 경제 침체 등 위기에 직면한 대중의 사기를 고무할까 봐 우려한다. 그리고 이재명의 대표 공약을 흡입내어 대선에서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파의 비판은 똑같은 재원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는 좌파 내의 이른바 ‘가성비’ 논쟁과는 다르다.

전 국민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려면 GDP의 15퍼센트 정도인 300조 원가량이 든다. 이 액수면 의료·교육·교통 등을 무상화해 보편 서비스로 만들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서민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 같은 것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노후 기초연금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지급액수가 너무 적다. 월 8만 원이면 딱 출퇴근 교통비 수준이다.

결국 좌우파 모두의 비판에 직면해 좌파적 기본소득론자들 스스로 기본소득의 요건 가운데 충분성 요건을 삭제했다.

그래서 당장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충분히”라는 기본소득 정신에 충실하기보다는 그것의 변형으로 청년 기본소득, 노인 기본소득(기초연금 확대), 농민기본소득(경기도에서 실행 직전이다) 등을 동시에 제안하고 있다.

전환

이재명은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이 계급 이해 절충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기본소득은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

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며] ...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 정책입니다.”(기본소득 공약발표)

이는 노동자·서민 대중, 부자, 기업주 등 화해하기 힘든 이해관계들을 절충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런데 장기 경제 침체의 시대에 자본의 이윤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시스템과 충돌하지 않고도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설득해 개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공상에 가깝다.

이재명 자신도 최근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1회성 25만 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철회했다. 정부 관료들이 꿈쩍도 안 했기 때문이다. 문제인 청와대도 이재명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최근 경제 침체로 일자리와 소득 위기가 깊어지면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데다 기후 위기 대응 등 때문에 산업 전환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은 시장에 강력히 도전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정의당·진보당 등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 최근 기본소득뿐 아니라 일자리보장제, 주4일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등 노동·복지 관련 제도들의 전면적 ‘전환’이 강조되는 배경이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보편적 복지의 대폭 확대를 뜻할 것이다.

지난 2년간 1인당 20여 만원 수준의 일회성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별별 떠는 기업주와 우파, 정부 관료들의 반응을 생각해도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대중 투쟁이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좌파적 기본소득론자들은 현실의 계급투쟁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심할 경우는 그것에 냉소적이기까지 하다.

4차산업혁명

이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 담론이 현실에 별로 부합하지도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투지와 사기를 낮추는 데 이용되는 과장된 논의일 뿐인데도 말이다.

이재명도 전북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 노동으로 삶을 책임지는 시대가 가고 있다.”

좌파적 기본소득 운동 안에서 녹색당이 월 80만 원을 내놓은 것이 가장 높은 액수고, 이재명도 최종 목표가 월 50만 원이다.

좌파적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이 노동하지 않을 자유(자본에게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을 자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급진적이기는 하지만, 기본소득론은 정작 그런 압력을 창출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진정으로 도전하기보다, “모두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체제를 우회하려 한다는 약점을 보인다. 최저임금에도 모자라는 기본소득이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려는 투쟁을 대체할 수는 없다.

사실 기존 복지 삭감 없이 월 5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폭넓고 지속적인 대중운동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좌파적 기본소득론자들은 선거와 득표를 통한 정책의 현실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은 최근 국토보유세와 탄소세의 명칭을 각각 토지불로소득 배당, 탄소 배당 식으로 바꾸려고 한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기본소득 슬로건에 맞게 재포장해 보겠다는 것이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는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나 승자독식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담론으로 유용할 수 있지만, 현실의 엄연한 계급 갈등을 헛되이 무마하려는 계급타협적 성격도 짙다.

결국 좌파적 기본소득론자들은 폭넓은 반자본주의적 대중 운동의 건설·결합을 강조하기보다 체제나 부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계급타협적 주류적 개혁)으로 나아가고 있다. 입법에 초점을 두면, 우파도 받아들일 ‘합리적 제도 논의’에 매몰되고 말 것이다. 잡담 장소가 따로 없을 것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이 갖는 모순과 약점은 기본소득 운동의 태생적 약점과 무관치 않다. 당장의 개혁 염원에 충분히 부합하지도 않고 대중투쟁에도 기여하지 않는 기본소득을 좌파가 굳이 지지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의료·교육·교통 등의 무상 제공과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라는 요구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급투쟁과 잘 결합될 수 있다.

기후 위기

COP26의 실패와 자본주의적 해결책의 한계

이원웅

제26차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결과는 기후 변화에 맞선 투쟁이 계속돼야 함을 보여 줬다.

COP26에 참가한 세계 지도자들은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해 뭔가 진전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 했다. 그러나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비판한 것처럼 그들의 결정은 “떠벌떠벌 헛소리”라는 말로 요약된다. 즉,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COP26은 산업화 이전을 기준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 이내, 가능하면 1.5도 이내로 유지한다는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과학자들이 최악의 사태를 피하려면 지켜야 할 상한으로 제시한 수치다.

목표

그러나 각국 정부의 기후 대책을 감시하는 ‘기후 대책 추적’(CAT)은 현재 정부들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더라도 2030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2.4도 오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각국 정부가 실제로 약속을 지키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 지금까지 많은 정부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왔다. 그래서 현재의 추세가 고스란히 유지될 경우 지구 평균 기온은 2.7도 오를 것이다.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높다. 이로 인해 심각한 홍수와 산불, 폭염 등의 순한 기상이변이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대응이 시급한 것이다.

기후 위기에 가장 책임이 적은 빈국들이 가장 먼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작은 섬나라들은 수장될 위기에 처했다. 마셜제도공화국의 수도 마주로는 도시의 96퍼센트가 만성적인 홍수 위험에 시달린다. 올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기후 변화가 촉발한 가뭄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심각한 기아에 직면했다. 이 같은 가뭄이 케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의 목소리는 COP 합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백신 부족으로 말미암아 빈국 사람들은 회의 참가 자체가 어려웠다. COP26을 기해 영국을 방문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을 지원했던 ‘COP 연대’에 따르면, 빈국의 여러 과학자들과 활동가들이 백신 부족과 영국 당국의 비협조 등으로 회의 참가를 포기했다. 한편, 회의장에 들어간 빈국 대표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강대국들끼리 마련한 합의안을 마지못해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화석연료 기업들은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대표단을 보냈다. 아마존 회장이자 막대한 온실가스를 내뿜는 우주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나, 핵발전 기술 개발을 지지하는 빌 게이츠 같은 대자본가들도 회의에 참석했다. COP는 철저히 부국과 기업주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언이어 실패한 COP, COP27도 벌써 헛되다 자본주의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COP26의 실패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멸종반란’ 활동가들

사실, 선진국들은 12년 전 코펜하겐 COP에서 빈국들에게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선진국들 자신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에 780억 달러, 2019년에 800억 달러를 지원한 것이 최대치였다.

약속

이조차도 상당히 부풀린 것이다. 국제 구호 단체 옥스팜의 조사를 보면, 선진국 정부들의 ‘지원금’ 대부분(2018년의 경우 74퍼센트)은 갚아야 하는 차관이었다. 이 중에서 시세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 준 돈을 따져보면 2017~2018년에 225억 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옥스팜은 추산한다.

그러나 COP26에서 선진국들이 빈국들에게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한들 기후 활동가들이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빈국들에 대한 지원은 화석연료 기업들이 받는 지원금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이번

COP26에서는 3억 5600만 달러 어치의 기후 적응 기금이 약속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조차도 인정했듯이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 기업들은 1분에 1100만 달러 꼴로 지원금을 받는다. 35분만 지나면 기후 적응 기금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편, COP26은 시장과 기술적 해법을 강조했다. ‘탄소 넷제로’나 탄소 상쇄 같은 개념이 중심에 놓였고, 탄소 포집처럼 입증되지 않은 비싼 기술이 초점이 됐다. 이 모든 것들은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회피하려는 거짓된 해결책들이다.

사실 COP26의 실패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COP는 이미 사반세기 동안 실패한 역사가 있다.

이것은 COP가 기후 위기를 낳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배자들은 여전히 기후 변화를 부정하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는 모든 노력에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

더 많은 지배자들은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야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구조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본주의의 기존 작동 방식을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 예컨대, 인센티브를 도입해 시장을 교정하거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처럼 인위적으로 시장을 만들어 내는 등 시장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지구 공학이나 탄소 포집 같은 입증되지 않은 기술적 해결책에 매달리는 것도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사업 기회와 시장 창출로 기후 위기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윤을 여전히 지상 목표로 놓고, 기후 위기 해결조차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보는 이런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낳거나 기존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모로코에는 남유럽으로 전력을 수출하는 태양열 발전소가 있다. 이 발전소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의 일부로 인정받았고,

모로코 정부는 이 사업을 자신의 대표적인 친환경 사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원래 그곳에서 목축을 하던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다. 게다가 모로코는 2040년에 심각한 물 부족이 예상되는 데도, 농업 용수와 식수로 사용돼야 할 물이 태양열 발전기를 식히는 데 사용되고 있다.

지배자들이 추진하는 ‘녹색 전환’은 전환의 비용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길 공산이 크다. 빈국에 사는 사람일수록, 여성이거나 유색 인종이거나 그 밖의 여러 차별받는 집단에 속한 사람일수록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경쟁

한편, 지배자들은 경쟁 논리 때문에 화석연료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일례로, 동지중해의 천연가스를 둘러싼 터키-그리스의 갈등은 국제적 수준의 경쟁이 화석연료에 대한 집착, 부정의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 준다.

올해 터키에서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 일어나고 홍수로 81명이 사망했지만, 터키 정부는 2053년이 돼서야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면서 2030년까지는 오히려 탄소 배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한다. 석탄 발전을 늘리고, 지중해와 흑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탐사·개발하려 한다. 터키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 나뭇의 영향권을 구축하려는 야심이 방해받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터키는, 마찬가지로 동지중해에서 이스라엘 등과 천연가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리스와 충돌하고 있다. 이는 군사적 긴장을 낳고 주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국내에서는 ‘녹색 전환’을 이유로 국영 전력 회사의 시설을 폐쇄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실업자나 불안정한 일자리 신세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무기를 사들이는 데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다.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무기 구입에 쓰인 예산은 보건 예산의 세 배나 됐다.

지배자들은 ‘녹색 전환’을 약속한다 해도 경쟁에 필요하기만 하다면 언제든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려 할 수 있다. 미국의 바이든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했지만, COP26을 앞두고 열린 G20에서는 석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석유를 증산하라고 산유국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체제의 지배자들은 기후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위기의 대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미 200년 넘게 화석연료가 뿌리를 내려 온 체제다. 자본주의를 점진적으로 고쳐 쓰는 식으로는 위기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이룰 수 없다. “기후 변화가 아닌 체제 변화”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체제를 쟁취하는 뜻이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생태, 계급

김준호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고 포장됐지만 말잔치로 끝났다. COP26에 모인 수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기후 변화를 저지할 구속력 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나도 합의하지 못했다.

화석연료는 계속 불태워질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 것이다. 그 대가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치를 것이다.

기후 위기 해결에 관심 없는 몇몇 정치인·기업가들의 탓만은 아니다. 기후 변화를 우려한다는 수많은 권력자들도 COP26의 실패에 일조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에서, 혁명이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유용한 분석을 제시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살폈다.

신진대사 균열

자연이 제공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자연을 상대로 노동을 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해 낸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과 능동적 관계를 맺고, 인간 자신과 자연 모두를 변화시킨다. 이 과정을 마르크스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신진대사”라고 불렀다.

이 신진대사에서 노동과 생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마르크스의 분석에서 출발점이었다. 마르크스는 노동과 생산을 조직하는 방식(생산양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그 신진대사의 방식도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신진대사에 회복 불가능한 균열”(《자본론》)을 낳는다고 했다.

예컨대,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이 토지와 이전 역사 내내 맺어 왔던 순환관계가 파괴됐다.

신석기 혁명 이래 인류는 동식물을 키워 식량을 얻고 거기서 얻은 영양분 일부를 분뇨(퇴비)로 토양에 환원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하에서는 대규모 농지에서 집중 생산된 식량이 상품의 형태로 도시로 옮겨졌고, 도시에서 나오는 수많은 분뇨는 자연에 환원되지 않고 오염원이 된다.

마르크스는 이를 이렇게 정리했다. “이윤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이 한 편으로는 지력을 소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력을 뿌리째 파괴했다.”(《자본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관점 자체가 자본주의 하에서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역사상 최초로 자연은 순전히 인간을 위한 대상, 순전히 유용성만을 위한 것이 됐고, 그 자체의 독자적 힘으로 인정되지 않게 됐

다.”(《그룬트리제》, 강조는 인용자)

엥겔스도 이렇게 지적했다. “피와 살과 두뇌를 가진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본주의에서] 인간은 마치 자연과 별개로 존재하면서 자연을 식민 점령하기라도 한 양 자연 위에 군림한다.”(《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이 수행한 구실》)

자본주의가 지배적 경제 체제가 되면서 이런 일은 확대됐다. 자연에 대한 수탈이 전례 없는 규모로 커졌다.

세계를 분할 지배한 열강은 전 세계에서 자연 자원을 수탈해 자국 자본주의 발전에 끌어다 썼다. 그런 강국들은 제3세계 나라들이 오늘날까지도 벗어 나지 못하는 곤궁과 환경 파괴 모두에 책임이 있다.

COP26에서도 이런 행태는 되풀이됐다. “석탄 감축”이라는 문구를 두고 언론은 일부 국가(중국, 인도)를 탓하지만 진정한 구도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소수가 합의한 문구를 다수의 가난한 나라들에 강요했다는 것이다.

경쟁

마르크스가 꼽은 자본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자본 축적이 경쟁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대자본들과 각국 정부들은 경쟁에

서 승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남보다 앞서려 애쓰지 않으면 추월당해 몰락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환경에 미칠 장기적 영향보다 자신의 행위로 이윤이 극대화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경쟁 논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대자본들과 각국 정부들은 세계 시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잃느니 인류 전체와 지구의 미래를 걸고 모험을 하는 쪽을 기꺼이 선택한다.

COP26 같은 국제 회의가 기후 위기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에 거듭 실패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쟁 논리를 그대로 두거나 심지어 끌어들어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 같은 대자본가와 강대국 정부들이 앞장서서 (이미 검증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옹호하는 것도, 현대 자본주의 전체가 구축한 화석연료 경제를 최소한으로만 바꾸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이윤 획득에 이롭다고 여겨서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다듯, 이윤 논리 때문에 “자연 법칙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인식이 그저 자연을 소비 대상으로든 생산 수단으로든 인간의 필요에 예측시키는 책략으로 나타나”(《그룬트리제》)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관계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이윤을 위해 자연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지속 가능한 세계, 즉 인간과 자연 사이의 “신진대사 균열”을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강박적 축적·경쟁 드라이브가 아니라 필요를 우선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 사회에서는 인간과 자연 모두에 이롭게 생산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서 노동계급의 구실이 특히 중요하다고 봤다. 노동계급은 자본주의를 굴리는 동력인 이윤을 만들어 낸다. 그 때문에 노동계급에게는 이윤의 생산을 멈춤으로써 자본주의의 작동을 멈출 힘이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또, 노동계급은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기구들을 대신해 사회를 노동계급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낸다.(이런 기구는 러시아 혁명기에 ‘소비에트’라 불렀고, 역사의 여러 순간에 거듭 출현했다.) 바로 그런 기구로 사회를 재편할 때, 노동계급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진행 중인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올 여름, 산불이 그리스를 덮쳤을 때 우파 정부의 대응은 무능하기 짝이 없었다. 주민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수수방관한 것도 모자라 진입을 시도하는 사람을 체포하고, ‘약탈꾼’으로 몰았다. 반면, 운송회사들은 이재민들을 상대로 짭짤한 수익을 거뒀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정부에 맞서 싸우면서 스스로 화재 진압을 조직했고, 정부가 화재 대응 방침을 수정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은 노동조합 등 여러 단체들과 함께 수도 아테네에서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에 맞선 연합’ 주최로 집회도 열었다.

물론 모든 좌파가 처음부터 이런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시위의 정치적 내용을 제공하고, 다른 노동계급 투쟁들과 이 운동을 연결시키는 SEK의 구실이 중요했다.

기후 위기로 갖가지 문제가 터져 나올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런 투쟁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사회주의나 멸종이나

반면, 지배계급이 지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원리, 즉 이윤 축적 드라이브와 국가 간 경쟁을 그대로 두고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폴란드 출신의 독일 혁명이자 로자 룩셈부르크는 제1차세계대전 당시에 인류가 “사회주의나 아만이나”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기후 위기는 “아만”이 이미 도래해 있음을 보여 준다. 홍수·산불 같은 기후 재앙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이 이미 수천만 명이다. 그런데도 강대국 지배자들은 인류를 멸종으로 이끌 수 있는 기후 위기 해결은 뒷전이고 이를 서로의 힘을 겨루는 데에 장기말로 쓰고 있다.

기후 위기는 인류를 “사회주의나 멸종이나” 하는 갈림길에 올리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는 기후 위기를 키우고도 해결은 못하는 자본주의를 다른 사회로 대체해야만 가능하다. 마르크스주의는 그런 사회를 왜, 그리고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천 지침이다.

추천 책·소책자



기후 위기, 불평등, 재앙 마르크스주의적 대안

장호중, 마틴 엠슨 외 지음, 책갈피, 624쪽, 24,000원

COP26 — 환경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마틴 엠슨 지음, 김준호 옮김, 노동자연대, 60쪽, 3,000원

전면 개장편 **빠닥**이들을 위한 환경 가이드 마르크스와 반자본주의 생태학

마틴 엠슨 지음, 김종환 옮김, 노동자연대, 84쪽, 3,000원

※ 소책자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책 소개 보기



소책자 소개 보기



기후 운동과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기후 변화 아닌, 체제 변화!”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김종환

11월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열린 영국과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는 기후 운동의 화려한 ‘컴백 무대’였다.

특히, 2019년에 그레타 툰베리와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동맹 휴업, 영국 멸종반란(XR) 운동과 함께 등장했던 기후 위기 운동 내 급진적 조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COP26에 모인 세계 정상들이 무언가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는 사실상 찾아 볼 수 없었다.

2009년 코펜하겐 총회 때부터 해마다 COP 항의 시위에 참가한 영국의 존 시나는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여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운동이 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NGO의 전략, 즉 탈정치적인 캠페인으로 기후 위기를 막고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운동에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각국의 COP 항의 행동 참가자들은 운동이 좌경화하고 있고, 특히 청년들의 급진화가 두드러진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운동이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저절로 혁명적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 논리뿐 아니라 살아 있는 활동가들의 논쟁과 개입이 있어야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좌경적 흐름 속에서도 갖가지 쟁점과 상이한 전략들이 등장한다. 여러 나라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기후 위기 운동 저변에 깔린 다음과 같은 위기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인류가 이미, 또는 머지 않아 ‘돌아올 수 없는 기후변화의 다리’를 건너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뒤에라도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게 과연 유의미할까?”

이에 대해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개연성을 따져 보면,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키더라도 자본주의 탓에 이미 망가진 지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실현된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가 연합 생산자(실제로 부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판단에 맡겨지고, 더는 맹목성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혁명으로 쟁취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조차도 여전히 ‘필연의 왕국’에 머무르는 것이고 인류는 여전히 물질적 제약과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해도 정확히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지구에 필요한 비상 조치를 실시해야 할 텐데 그런 조치는 오직 민주적 계획 경제에 기초할 때만 가능합니다.”



지구적 비상 상황에 대응하려면 세계 노동계급의 단결이 필수적이다. 그런 단결은 의식적인 노력과 정치적 개입으로써만 이룰 수 있다. 11월 유엔 기후총회에 항의하는 ‘COP26 남반구 민중 행동’

혁명의 승리가 앞당겨질수록 지구는 덜 망가질 것이고 비상 조치의 규모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상이한 전략들

일각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6차례에 걸친 COP의 실패에서 보듯 자본주의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사반세기 이상 시간만 까먹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1980년대부터 기후 변화를 경고해 왔는데도 말이다.

더욱이 1917~1918년 러시아와 독일 혁명, 2011년 아랍 혁명(튀니지·이집트·리비아·시리아·바레인·예멘 등)에서 보듯 혁명은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위기감에서 각종 전략이 제출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다른 모든 쟁점은 제쳐 두고 기후 위기에만 ‘울인’하자’는 것이다.

그 논리는 이렇다. 최대한 광범한 사람들을 결집하려면 젠더나 인종차별처럼 논쟁적 쟁점은 언급하지 말고, ‘편 가르기’ 우려가 있으니 정치 조직도 배제하고, 재원이 많이 필요한 복지 문제 같은 것도 기후 위기 대응보다 후순위로 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기후 위기를 낳은 자본주의에 맞서 단결할 잠재력이 있는 운동과 세력들을 불필요하게 반목시킬 수 있다. 예컨대, 지금 혁명이 한창인 북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사람들이 기후 변화로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 왔다. 그렇다고 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난 수단인들에게 ‘군부에 맞서 싸우는 투쟁은 일단 미뤄두고 온실가스 감축부터 고민하는 게 어떨까요?’ 하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온

실가스를 줄이는 투쟁도 여러분의 혁명과 함께합니다” 하고 말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캐나다에서는 경제 위기와 주택 가격 인상으로 주요 도시에 노숙자가 늘면서 ‘텐트 시티’가 점점 많아졌고 이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단속도 심해지고 있다. 기후 위기가 심해질수록 안전한 주거 환경 문제는 중요해질 텐데 이런 문제를 “후순위”라고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다양한 운동이 저마다의 경계를 넘어 서로 논쟁하면서도 공통점을 찾을 때 진정한 단결이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착취와 억압에 맞서는 모든 투쟁을 지지하는 혁명적 정치야말로 운동들이 서로 만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후 문제의 시급함 때문에 화석연료 개발 설비나 온실가스 배출 시설을 파괴하자는 ‘직접행동’ 전략도 점차 청중을 얻고 있다. 송유관을 파괴하자는 안드레아스 말름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화석연료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대중 다수가 참여는커녕 수긍하기도 어려운 전략이다. 오히려 운동을 ‘파괴적 행동을 지지하는 소수’ 대 나머지로 분열시킬 위험마저 있다. 그러면 지배자들은 즉시 반격할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모종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에 파열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주체가 소수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이 아니라 노동계급 대중이어야 한다는 점이 진정한 차이다.

노동계급의 단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노동계급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 수준에서 민주적 계획 경제를 실현해서 지구적 비상 사

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재앙이 닥칠수록 계급 분단선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이미 경제 위기, 코로나19, 과거의 전쟁 등 숱한 역사가 이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친다고 노동계급이 저절로 단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배계급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떠넘기기 위해 온갖 방식으로 노동계급을 이간하려 들 것이다. 오늘날 저들이 여성 차별을 유지하고 또 젠더 갈등을 부추기거나, 난민 등에 대한 인종차별을 부추기거나, 애국심을 부추기면서 타국을 비난하는 것은 그 전형이다.

여성차별에 반대하는 주장은 많지만 그 원인과 대안을 자본주의 문제로 일관되게 연결시키는 것은 혁명적 사회주의 전략뿐이다. 인종차별과 애국주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낙태권 운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 선주민 권리 운동, 노동조합 운동에 함께하면서 이 운동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극우 또한 기후 위기를 틈타 대중 속에 뿌리내리려 한다는 점에서 이런 작업은 더욱 중요하다. 예컨대,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극우가 ‘우리 탄광과 일자리를 지키자’, 난민 문제가 심각한 유럽에서는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탄소를 줄이자’ 하고 선동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요구인데 대중의 이익을 방어할 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단결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는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30여 년 전 영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저항을 분쇄하며 석탄 기

반 발전을 천연가스 기반으로 전환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전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당시 1년에 걸친 치열한 광원 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종 승리하자 수많은 광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사실상 ‘잉여 인간’으로 취급받았다. 당시 몰락한 탄광 도시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낙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곳이 많다.

이런 비극이 세계적 수준에서 재현되는 것을 피하려면 노동자들이 아니라 사용자들과 정부가 책임과 비용을 떠안도록 해야 한다. 경제·기후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나 국가 경쟁력 논리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필요에 따른 전환을 이루려면 결국 자본의 권력을 깨뜨려야 한다. (반면, 이런 전환을 “사회적 대화”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수십 년 동안 세계 도처의 경험으로 거듭 반박돼 왔다.)

현재 기후 정의 운동에는 여러 운동들이 함께하고 있다. 올해 COP26 시위에서는 그레타 툰베리도 노동조합과 함께 행진했다. 이것은 결코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많은 활동가들이 운동을 넘나들며 논쟁을 통해 공통점을 찾고 공동 행동을 건설하려고 노력한 결과다.

기후, 경제, 보건, 전쟁 가능성 등 온갖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도처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늘 뿐 아니라 개혁주의 정치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좌우 광폭으로 대안을 찾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끈기 있고 집단적, 조직적 노력이 필요하다.

11월 14일 국제사회주의경향(ST)이 개최한 기후 위기 온라인 워크숍에서 여러 나라 활동가들을 취재한 것에 바탕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 임금 투쟁으로 벌충해야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 터키, 뉴질랜드 등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도 11월 소비자물가가 3.7퍼센트 오르며 9년 11개월 만(2011년 12월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월에도 소비자물가가 3.2퍼센트 올랐으니, 2개월 연속 3퍼센트대 인상이다.

휘발유, 경유, LPG(액화석유가스) 등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한 것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한국은 특히 '밥상 물가'(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가 5퍼센트나 올라 인상률이 높다.

돼지고기·쇠고기·계란 등과 일부 채소·과일 가격이 급등하고,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국수 등의 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치솟은 집값 부담까지 감안하면, 실제 노동자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의 부담은 더욱 클 것이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급락했던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데 석유 등 원자재와 반도체 등 일부 상품에서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배럴당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진 유가는 얼마 전 8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비 감소가 예상되면서 석유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오펙(OPEC, 석유수출국기구)을 비롯한 석유 수출 국가들은 지난해에 본 손실을 만회하려고 생산량을 조절해 유가를 높게 유지하려 한다.

석유 가격 상승으로 SK이노베이션,



한국은 특히 밥상 물가(식료품 물가)가 크게 올라 노동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정유사들은 올해 3분기에만 수천억 원씩 영업이익을 거두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랴 부랴 유류세를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최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LPG 가격은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겨울철 난방 연료 수요가 늘면서 한 달 만에 유류세 인하분을 뛰어넘은 것이다.

반면, 임금인상률은 물가 상승을 겨우 따라잡는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9월 임금

인상 자료를 보면, 상용직 노동자는 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퍼센트(15만 8000원),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3.8퍼센트(6만 3000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

올해 경제성장률(4퍼센트가량)을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물가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더 적극 지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필수 공공 서비스와 생필품에 정부가 보조금 등을 지급해서 그 가격을 낮춰야 한다.

특히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사실 사용자와 정부 관료들이 최근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상승을 촉발할 수 있어서다.

일시적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과 재무장관 재닛 옐런이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그만 사용하고 인플레이션 억제에 더 집중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옐런은 1970년대처럼 임금-물가가 지속적으로 연쇄 급등하지 않으려면 임금 상승세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

세계경제 불안정이 낳은 물가 인상을 모두 노동자가 부담하게 하고, 기업의 이윤은 기필코 지키려 하는 것이다.

임금이 물가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더 후퇴한다. 특히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물가 인상은 삶을 위협하는 절박한 문제다.

몇몇 산업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투쟁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이를 이용해 임금을 올리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강동훈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되는가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생계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류 경제학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항구적”일지, “일시적”일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벌어지는 현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경기 후퇴를 동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팬데믹 하에서 극단적으로 주저앉았던 경기가 복구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교란됐던 공급망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일부 부문에서는 노동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물가를 빠르게 밀어 올리고 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일 것이라고 보든 아니든,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임금 인상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사고 난방을 하는 문제는 미래가 아니라 당장 필

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코로나19로 경기 회복이 다시금 지연될 가능성은 일단 논외로 하고).

주류 경제학은 인플레이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으로도 온전히 이해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자본 축적

그럼에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은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요인에 주로 달려 있다.

첫째는 자본 순환에 화폐를 공급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화폐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또 파괴된다. 특히 최근에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고 그 돈으로 은행한테서 자산을 사들이는 방

식(“양적 완화”)으로 화폐를 대거 공급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대규모 양적완화에도 물가가 하락했던 것은, 이렇게 생성된 화폐가 금융권에만 머물러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줬다.

하지만 금융권을 넘어 좀 더 광범한 자본주의 경제 영역으로 돈이 흘러들어 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거대 기업 두세 곳이 장악한 부문에서 기업들이 수익성 하락을 만회하려고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잠재력은 더 커진다.

둘째는 축적 과정이다.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안와르 샤이크는 자본축적률은 높는데 이윤율이 낮을 때 인플레이션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수요의 많은 부분을 자본 축적이 차지하기 때문이다(일부 주류 경제학자들은 노동자들의 임금 수요만을 생각하

지만). 1970년대에 벌어진 스태그플레이션도 이런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당시 축적은 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이윤율은 빠르게 떨어졌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축적 속도가 꽤 낮아졌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장기 불황”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이다.

물론 국가 주도로도 자본 축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중앙은행이 만든 화폐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가가 민간 부문의 낮은 투자 수준을 상쇄할 정도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찾아들고 다시금 장기 불황의 패턴(상대적으로 취약한 성장, 비대해지고 불안정한 금융 시스템, 국가와 중앙은행의 저금리 등 지원책에 의존하기)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배계급이 인플레이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지배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지배자들이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금리를 올리기로 한다면, 세계경제의 상당 부분이 기대고 있는 신용 거품이 터질 위험이 있고, 그리되면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이 파산할 것이다.

특히 중국 때문에 위기의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중국은 세계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나라지만 지금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이 앞서 수십 년 동안 겪었던 문제들(수익성 저하, 경제 성장이 갈수록 신용에 기대는 것, 금융 불안정)을 겪고 있다.

장기 불황으로의 복귀든 신용 거품의 붕괴든, 자본주의의 깊은 구조적 문제(낮은 수익성, 최상위 기업들의 거대한 규모, 비대해진 금융 시스템)가 다음번 위기를 낳을 것이다. 언제가 됐든 말이다.

청년층의 사회 불만은 어떻게 젠더 갈등인 양 왜곡됐는가

정진희

이 글은 12월 2일 노동자연대TV가 주최한 온라인토론회 ‘젠더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필자가 한 발표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청년층의 ‘젠더 갈등’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젠더 갈등 문제는 대략 2018년부터 사회적·정치적 쟁점이 돼 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부동층이 많은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려고 달려들면서 최근 더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젠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놓고 여러 얘기가 나왔다. 먼저 정치인들과 언론이 흔히 ‘젠더 갈등’의 수준을 과장한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일명 ‘이대남 대 이대녀’ 구도가 그렇다. 몇몇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마치 20대 남성 전체와 20대 여성 전체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엄청난 과장이다.

물론 그렇다고 젠더 갈등이 그저 허구적인 담론일 뿐인 것은 아니다. 일부 여성 개인들과 일부 남성 개인들 사이에 실제로 갈등이 일어난다. 이것을 정치인들과 주류 언론이 부풀리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청년들이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갖고 있는 불만을 호도하고 다른 데로 향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젠더 갈등의 원인을 설명해 보겠다.

20대 남성 역차별론

20대 남녀 갈등의 원인이 20대 남성이 차별받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등 우파 정치인들과 민주당의 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친여성 정책으로 20대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자 일부도 이런 주장에 동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을 이렇게 해석했다. 즉, 20대 남성이 문재인 정부의 친여성 정책에 반발해 국민의힘 오세훈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지지 하락은 성별과 연령대를 불문하고 나타난 특징이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심판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의 지지도 성별 격차가 있긴 해도 동반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민주당 패배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친페미니즘 때문이라는 이준석의 주장은 청년층의 불만을 호도하며 성별로 이간질한 것이다.

우파는 여성의 지위가 예전보다 나아진 반면 요즘엔 페미니즘 때문에 오히려 젊은 남성이 역차별당한다고 한다. 남성 차별의 사례로 군 의무복무, 여성할당제 등이 꼽힌다.

오늘날 젊은 여성이 더는 차별받지 않을까? 여성의 교육 수준이나 성취

를 보면 얼핏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채용과 승진 상의 차별, 임금 불평등, 여성 신체의 상품화와 왜곡된 이미지 등 차별이 엄존한다. 20대 여성 다수가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여기고, 지난 몇 년간 성차별 항의 운동에 많이 참가한 이유다.

20대 남성이 차별받느냐에 대해서는 혼란이 더 크다. 남성 차별은 흔히 우파가 하는 주장이지만, 우파만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 평등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보는 사람이 꽤 된다.

그러나 이는 ‘차별’을 사회 전체에서 특정 집단이 차지하는 낮은 지위로 보지 않고 시장 경쟁에서 개인들이 겪는 불리함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차별 개념을 느슨하게 쓰면, 여성이 사회에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차별과 천대를 겪는다는 점이 흐려지기 쉽다.

병역 의무

남성에게만 부과된 병역 의무가 남성 차별이라는 주장을 살펴보자. 청년 남성들이 힘든 군 복무를 한다는 것 자체와, 하고 나와도 별 보상이 없는 것이 핵심 문제다.

그러나 한국 남성들이 병역 의무로 고통과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하면 몰라도, 여성처럼 (체계적인) 차별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국 국가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여성을 우대해서가 아니다. 한국군 육군이 중요한 친제국주의 지정학의 조건에서 신체 조건상 남성이 군 자원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우선해야 한다고 간주한 결과다.

병역 의무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은 많은 여성도 충분히 공감한다. 군대 사병들의 열악한 처지와 인권 침해를 생각해 보면 특히 그렇다.

그래서 병사의 처우를 크게 개선하는 것과 함께,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다만, 그 보상이 여성이나 장애인 등 군 미필자 집단에겐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1999년 현재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여성할당제

‘남성 차별’의 또 다른 사례로 꼽히는 여성할당제 같은 여성 우대 조치를 문제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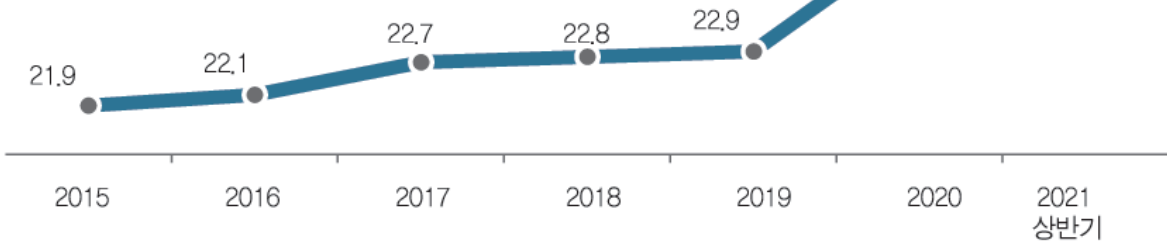
이준석은 20대 남성을 위한 정책이라며 여성할당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여성할당제로 임명된 여성 장관들 탓으로 돌렸다. 다행히 이런 노골적인 성차별 주장에 찬동하는 청년은 적다.

이런 주장보다는 여성할당제가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논리가 청년들 사이에서 훨씬 많이 받아들여진다. 채용 관련 여성 우대 정책이 공정성을 침해한



대규모 실업과 불평등 때문에 청년층의 불만이 크다

청년(15~29세) 확장실업률



2030 내의 자산 격차

하위 20% 2000만 원

2000

상위 20% 8억

자료 / 통계청

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여성할당제에 대한 과장이 많음을 봐야 한다. 여성할당제가 20대 남성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은 참말이 아니다. 정당 비례대표 선거(여성 후보자를 50퍼센트 추천)와 일부 고위직을 제외하면, 여성할당제가 시행되는 곳은 별로 없다. 민간 기업의 채용 과정에 여성할당제는 없고, 국공립대·공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성별 균형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정도이다. 공무원 채용 과정과 일부 공기업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지만, 남성에게 불리한 제도는 아니다. 남성이나 여성이 합격자의 30퍼센트 미만일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이므로, 성별로 인한 탈락자가 생기지는 않는다.

공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이 2019년 기준 16.7퍼센트밖에 안 되므로, 여성의 비중이 낮을 때는 성별 균형 제도가 여성 우대 정책의 효과를 낸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에서는 이 제도가 여성 우대 정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2003~2011년까지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자로 여성이 더 많았으나, 2012년부터는 남성이 더 많았다. 2015~2019년 추가 채용 인원은 남성이 약 76퍼센트를 차지했다.

이처럼, 여성할당제 때문에 청년 남성이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생각은 근거가 취약하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만과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 일부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 경쟁 때문에 원자화된 개인들은 집단적 투쟁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보수적 사상으로 이끌리기 쉽다.

능력주의가 공정한 경쟁 원칙이라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에 따라 개인들이 얻는 기회의 차이가 크다. 개인들이 능력에 따

라 공정한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착각이고, 사회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뿐이다.

젠더 갈등의 원인으로 20대 남녀의 의식 격차도 거론된다. 흔히 ‘이대남은 안티 페미니즘, 이대녀는 친페미니즘’으로 과장한다.

그러나 청년층 남성 중에는 페미니즘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긴 해도, 청년의 다수가 안티 페미니즘인 것은 아니다. 여성 차별의 현실 자체를 부정하며 차별을 옹호하는 안티 페미니즘은 청년 남성 중 소수에 불과하다.

‘시민의식 조사자료’(한국민주주의연구소·한국리서치) 등을 토대로 한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최종숙, 2020년) 논문은 이렇게 지적한다. “20대 남성의 성평등 의식은 3040세대 남성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20대 남녀의 성평등 의식 격차도 다른 세대 남녀에 비해 크다고 하긴 어렵다.”

젠더 갈등의 원인 지배자들의 전략: 이간질 통한 각개격파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청년층의 환멸을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젠더 갈등 프레임을 이용한다. 윤석열은 당 경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과, 청년 남성의 삶이 악화된 이유를 호도하고자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택난, 빈곤 등 청년 대중이 크게 고통받는 문제는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때문에 생겨나거나 악화된 게 아니다.

사실 문재인인의 '페미니즘'은 실질적 개혁은 거의 없는 생색내기에 가까웠다. 그래서 청년층 여성을 포함해 많은 여성이 불만을 갖게 됐다. 낙태, 여성고용과 임금 등의 조건 개선 미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청년층 내의 젠더 갈등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와 경쟁, 그리고 지배계급의 '이간질 통한 각개격파' 전략에서 비롯한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열악한 조건과 천대 때문에 많은 청년이 불만과 울분을 느낀다. 자신의 삶과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거나 부족할 때, 권력자들이 성별로 이간질하면 여성과 남성의 분노가 서로를 향할 수 있다.

실업과 빈곤이 단지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20대에서 두드러진



다. 올 상반기 15~29세 확장실업률(25.4퍼센트)은 30대(11.7퍼센트), 40대(9.8퍼센트)보다 월등히 높다. 2030 내의 자산 격차도 크다. 문재인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이 심화됐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의 분노가 큰 이유이다.

실업과 빈곤, 일자리 불안정, 주택난 등은 대다수 청년 여성과 남성의 공통된 불만이다. 이것은 청년 개개인들의 노력 부족 탓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와 그 사회 구조의 산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심각한 불평등이 있고 장기 불황은 이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지배계급은 이윤을 보호하려고 불황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해 대중의 삶을 악화시킨다. 그러면서 성, 인종, 성적지향 등의 차이를 이용해 특

정 집단의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중의 불만이 자기네를 향하지 않고 체제의 희생자들을 비난하게 조장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젠더 갈등을 해소하려면, 노동계급을 성별로 갈라놓는 주장과 실천을 거부하며 폭넓고 비종파적인 방식으로 대중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이 단결해 투쟁하면서 자신감을 얻으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는 사상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은 공통된 불만이 있기에 정부나 기업주들에 맞서 계급적으로 단결해 싸울 수 있다.

당연히 여성 차별에 맞서야 한다. 물론 여성운동이 성폭력 쟁점 중심으로 벌어지고 남성 개개인을 규탄하는 경향은 극복돼야 한다. 투쟁의 초점을 여성의 처지 개선,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체제, 지배계급 권력에 맞춰야 한다.

여성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려면, 성차별에 맞선 투쟁이 여성만의 투쟁이 아니라 보통의 남녀가 함께 참가하는 대중 운동이 돼야 한다.

여성 해방은 착취받고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해방과 분리될 수 없고, 여성 차별에 맞선 운동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운동의 일부가 돼야 한다.

급진 페미니즘과 좌파의 약점

젠더 갈등이 부각된 데에는 급진 페미니즘 측의 약점도 작용한다. 물론 주된 책임은 지배계급에 있다. 하지만 여성 차별에 맞서는 세력이 그 표적을 잘못 맞추면 효과적인 저항을 건설하지 못하고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여성단체들과 젊은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는 급진 페미니즘의 영향력이 크다. 급진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권력 관계로 규정하며 암묵적·명시적으로 남성 일반을 잠재적 가해자, 여성 일반을 피해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또, 역사유물론적 인식이 없기에 차별에 반대해 흔히 도덕주의적으로 대응한다. 심지어 여성에게 무조건적인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많은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폭력이나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 이런 태도를 드러낸다. 그들은 남성 개인들과 여성 개인들 사이의 갈등을 모두 '여성 혐오'로 치부하며 남성 일반을 도매금으로 매도한다. 이런 주장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크게 득세했다.

이런 접근은 계급적 단결을 저해한다. 실제로 급진 페미니즘 일각의 과도한 주장과 실천은 평범한 청년 남성 상당수의 반발을 낳았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이 낳은 환멸과 결합돼 우파에게 득이 돼 왔다.

급진 페미니즘의 논리를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여 남녀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불법촬영 혐의운동의 조직자들이 그런 사례였다. 물론 그 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청년 여성들이 다 그랬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 운동은 진정 급진적인 대중 운동이었다. 온건한 주요 여성단체 지도자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와 권력 기관들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그 운동을 지지했다.

안타깝게도 그 운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단일 쟁점 운동의 한계와 함께, 운동 조직자들이 남성 참가를 금지하고 배척하면서 연대와 효과적인 저항 건설에 난점이 있었다. 남성을 잠

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노골적 분위기 때문에 청년층 남성 사이에서 상당한 반발도 낳았다.

좌파는 이런 상황에서 계급적 단결을 도모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경험을 보면, 온건파·급진파 가리지 않고 좌파들 대부분은 급진 페미니즘의 개념들을 대폭 수용하거나 그에 굴복하고 주류 여성운동을 추수하면서 오히려 젠더 분열에 일조했다.

게다가 많은 좌파들은 성 관련 분쟁을 이용해 경쟁 좌파나 라이벌 인물에게 '성폭력 가해' 낙인을 찍으며 배척하고 연대를 파괴하기도 했다.

이런 분열주의는 가혹이나 분열된 좌파를 더욱 분열하게 만들어 기층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고, 성평등을 전진시킬 수 있는 계급적으로 단결된 진정으로 급진적인 노동자 운동을 건설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문재인인의 개혁 배신을 우파가 이용해 득을 보는 토양이 조성된 현 상황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음을 좌파들은 자성적으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 간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김하영

지난호(395호)에서 양효영 기자가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의 의미를 이모저모 분석했다. 나는 이에 덧붙여서 IT 거대 다국적기업과 국가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라는 면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조세 정의나 세수 확충 차원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를 조명하지만,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둘러싼 더 큰 맥락을 봐야 한다.

유럽연합이 디지털세 도입을 오랫동안 추진하고 심지어 일부 유럽 국가들이 OECD 합의안 도출이 실패하면 독자적 디지털 서비스세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했던 것은 단지 과세 수익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자기 나라 디지털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이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미국의 디지털 거대 기업들의 유럽연합 내 우위(시장 지배)를 인정하거나, 그 기업들에 매이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며, 자국의 디지털 산업을 키우려 한다.

유럽연합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이하 GDPR) 등 데이터 보호나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도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유럽 국가들이 구글 등 IT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데이터 수집과 처리 등을 규제하고 나선 것인데, 미국은 이런 조처들이 미국의 IT 거대 기업들의 이익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우려한다.

GDPR 등은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지만 그 뒤에는 데이터 사용을 둘러싼 기업 간 이익 다툼과 국가 간 갈등이 있다.(이는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와 단절하지 않는 한 진정한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의 공적 이용이 가능하지 않음을 뜻한다.)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이전을 옹호하는 반면, 유럽연합은 적정성 평가 통과를 요구하며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려 한다. 구글 같

은 기업에게는 이미 널리 퍼져 있고 거대한 데이터 수집 수단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것이 신예 경쟁자를 따돌리는 무기인데도 말이다. 데이터 국경 이전 문제에는 국가안보 문제도 얽혀 있다. 중국은 이를 이유로 데이터 현지화를 시행하며, 이는 미국과의 중요한 갈등 사안이다.

글로벌 디지털세에 합의한 미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견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세수를 충원하려고 또는 서방 동맹 복구를 위한 양보로 유럽연합의 디지털세 요구를 수용했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미국은 다자 합의를 이끌어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 주는 동시에, OECD 합의안에 미국의 요구를 상당히 많이 반영시켰다.

미국은 자국의 IT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이익 보호를 맹렬히 추진했다. 이들은 미국의 선도 기업일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부문이다. 이번 OECD 합의를 통해 유럽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폐지하기로 한 한편, 합의된 '디지털세'는 이름이 무색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또, 애초 주로 미국 IT 거대 기업이 적용 대상이었던 것에서 소비자 대상 사업(컴퓨터, 휴대폰, 자동차 등)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 것도 경쟁자를 겨냥하는 미국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을 제안한 것도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국 기업의 국외 이탈을 막고 핵심 부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소수 IT 거대 기업이 기존 경제 질서나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디지털 특성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지배한다는 생각이 완전한 착각임을 보여 준다. IT 거대 기업들은 현지 국가의 용인 없이는 시장 지배를 유지하기 어렵고, 국가 간 갈등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서 지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국가 간 경쟁의 한가운데 있다.

이 글과 관련한 필자의 소책자와 책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김하영 지음.
56쪽, 4,000원, 노동자연대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김하영 지음.
400쪽, 16,000원, 책갈피



위드 코로나 실패해 놓고 고통만 전가 방역패스 의무화 중단하라

장호중

선부른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자 정부는 결국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다시 강화했다.

확진자 수가 5000명대에 이르러도 버틸 수 있을 거라더니 사실상 5000명대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손을 들었다.

치명률은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를 뜻한다. 그래서 치명률 통계는 해당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관계자를 인용한 <한겨레> 보도를 보면 11월 국내 코로나 치명률은 1.01퍼센트로 지난 5월 0.44퍼센트보다 2.5배 높다. 심지어 백신 접종 시작 전보다도 높아졌다. 일부 신중한 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백신보다 거리두기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는 더 효과적이었던 셈이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강조했던 것처럼 정부가 신속히 가동할 수 있는 병상과 인력을 준비했더라면 사정은 크게 달랐을 수 있다.

그러나 병상과 인력은 여전히 부족했다. 정부는 이를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그만큼 오만했다.

재택 '치료'?

정부는 거꾸로 환자를 집에 머물게 하는 정책을 택했고 현재 그 수가 1만 명을 훌쩍 넘겼다. 말이 '재택치료'지 필요할 때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다. 애당초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 재택치료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2월 6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1012명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 환자다. 11월 21~27일엔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만 10명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서, 감염을 피하기 어려운 확진자들의 (가족을 포함한) 동거인들과 지역 거주 주민들의 불안까지 고려하면 '재택치료'는 사실상 방치였다.

병원에 있어도 의료진의 상담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집에서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형식적인 대처에 불안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크게 늘었다.

요양병원 등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해도 환자를 이송하지 못해 막대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지 이미 오래다.

위드 코로나를 멈춘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나중에 재정 지원으로 보상해야 하는 영업제한 조치 대신에 사적 모임 인원수만 제한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도 종료했다. **사실 서민 지원 지출을 줄이는 것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선불리 시행한 핵심 동기 중 하나였다.**

이러니 여당 대선후보 이재명조차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쥐꼬리만 큼 지원해서, 이 차이만큼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고 말한다.

물론 이재명이 다른 공약들에서 조금씩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집권한다고 얼마나 더 나아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자본가들은 이런 재정 지출 부담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봐 우려하고, (기재부만이 아니라) 국가 기구 전체가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자신의 핵심 임무 중 하나로 삼기 때문이다.

팬데믹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속죄양 만들기에다 나섰지만 큰 효과는 없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된 책임을 묻겠다며 일부 개인들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이 더 두드러진다.

정부가 신천지를 살벌하게 마녀사냥했지만, 이만희 신천지 교회 총회장은 최근 항소심에서 방역 방해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백신 접종, 강요가 아니라 설득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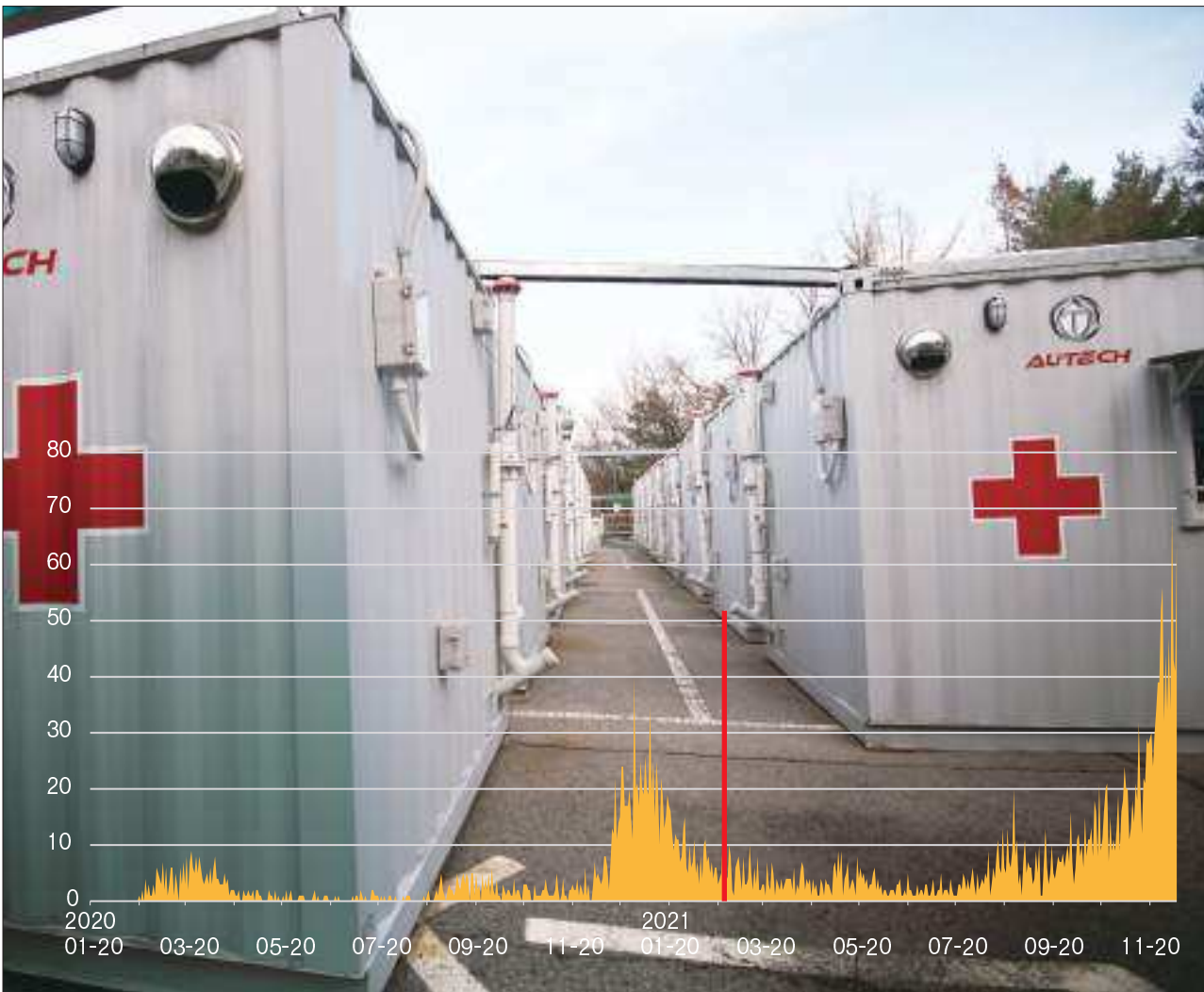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가 강화하기로 한 방역패스 제도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경우 코로나에 감염되도 위험이 크지 않아 백신 접종을 '권고'하기만 한다더니 별 설 명도 없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백신 접종은 필요한 일이지만, 청소년들의 상당수와 그 부모들이 백신 접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정부는 안전하다며 접종을 강행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사실상 11월로 종료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젊은 층에서 매우 드물긴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도 정부는 '인과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백신의 효능을 입증해야 할 건 정부지, 사람들이 강제로 믿어야 할 일이 아니다. 접종은 정부가 제대로 된 치료와 피해보상 대책을 내놓으며 설득할 문제다. 강제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것은 적반하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수 추이 백신 접종 시작(붉은색) 전보다도 사망자가 늘어났다

백신 접종이 감염 자체를 막는 것도 아닌데 미접종자에게만 차별적 조치를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 방식도 사람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학원과 도서관 등은 상당 부분 방과 후 돌봄 기능도 대신한다. 이곳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평범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이 방역패스 정책에는 노동계급 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보인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입이 닳도록 지적했듯이 사회의 다른 부문은 모두 '정상' 가동되도록 하면서 이런 곳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 설득력이 없다. 한 언론 보도가 지적했듯이, '마스크 쓰고 책만 보는 도서관 출입'과 여러 사람이 모여 식사하고 술마시는 자리 중 어느 곳이 더 위험한가.

요컨대 문재인 정부는 병상과 인력도 준비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다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이제 그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며 온갖 부담을 지우고 있다.

유럽 일부 나라들의 경험에서 보듯 정부가 이렇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길수록 방역 조치에 대한 반감은 커질 것이고 우파는 이를 이용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득을 보려 할 것이다.

앞뒤도 안 맞고 부담만 가중시키는 방역패스 의무화는 중단돼야 한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12월 16일(목) 오후 8시

발제 김영익

<노동자연대> 기자,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참가신청 bit.ly/meeting1216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대만해협이 미·중 간 무력 시위로 뜨겁습니다. 이곳을 몇 년 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꼽힙니다. 한국은 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죠. 양인(중국과 대만관계를 둘러싼 오래된 문제)이 왜 점점 악화되는 것일까요? 대만이 중국 권위주의에 맞선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는 미국, '해군의 중국'을 강조하며 대만을 압박하는 중국, 대만의 독립과 통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된 대만 문제를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노동자연대TV 채널에서 지난 온라인 토론회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